

# 북한의 화폐경제: 이행과 변화전망

이 영 훈\*

- |                  |               |
|------------------|---------------|
| I. 서론            | IV. 화폐경제로의 이행 |
| II. 북한 화폐의 특징    | V. 결론 및 전망    |
| III. 북한 화폐제도의 변천 |               |

---

## Abstract

---

### The Monetary Economy of North Korea: Transformation and Prospect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conomic and cultural changes in North Korea through the change of monetary function,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toward money, and the monetary institutions. Especially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recent progressiv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from planned economy to market economy.

Money is a useful tool to analyze the transformation of socialist countries like North Korea. Since money is regarded as something eventually to be perished in the stage of communism in the belief of many socialists, the circulation of money itself in the socialist countries had been intentionally suppressed.

Therefore, the more widespread circulation of money and the general public's perceptual change toward money suggest that the essential changes of economic and cultural system are already in progress.

With these in mind,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money by comparing with those in the capitalist countries; to analyze the economic and cultural change through the designs & patterns of monies issued during the every monetary reform period; and to analyze th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into monetary economy since 1990.

**Key Words:** Monetary Economy, Transformation of Economic System, Monetary Reform, Fetishism of Money

---

---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

## I. 서론

본 연구는 화폐의 기능, 화폐에 대한 인식, 그리고 화폐제도 등의 변화를 통해 북한의 경제와 문화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화폐의 관점에서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처럼 화폐를 통해 북한 사회경제의 변화를 분석하는 이유는 화폐의 기능과 인식, 그리고 제도의 변화가 한 사회의 경제체제 변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회주의자들은 화폐를 공산주의단계에 이르면 폐지되어야 할 수단으로 인식하였고 그에 따라 그 기능을 매우 제한해 왔다. 따라서 화폐기능이 확대되고 화폐에 대한 인식이 변한다는 것은 경제체제와 의식구조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분석의 주된 내용은 첫째, 화폐경제로 이행되기 전 단계의 북한 화폐의 특징과 화폐제도의 변천이다. 먼저 북한 화폐의 특징을 북한 화폐의 정의와 기능, 그리고 화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자본주의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는 화폐의 기능과 그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면서 북한 경제와 문화의 특징을, 자본주의의 화폐경제와 물신숭배와 대비하여, ‘현물경제와 이상숭배’로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북한 화폐의 변천을 화폐개혁(또는 교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화폐개혁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이유는 대체로 화폐개혁은 북한경제의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서 이루어져서 시대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게 하며, 특히 화폐 도안의 변화를 통해 당시의 경제와 사회문화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1990년대 들어 시장경제의 진전에 따른 북한 화폐의 기능과 화폐에 대한 주민의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앞에서 분석한 내용과 대비함으로써 북한 경제가 현물경제에서 화폐경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화폐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화폐』<sup>1</sup>를 포함하여 일부 시도된 바가 있으나 깊이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화폐경제로의 이행을 분석하기에 앞서 북한 화폐의 특징과 변천 또한 새롭게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에 따라 이들 분석들이 화폐경제로의 이행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지만 각기 하나의 독립된 연구주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sup>1</sup> 한국은행, 『북한의 화폐』 (서울: 한국은행, 1992).

## II. 북한 화폐의 특징

### 1. 화폐의 정의<sup>2</sup>

화폐는 상품교환을 매개해주는 수단으로써 탄생하였고 상품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느 상품이든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 등가물’(general equivalent)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형성된 화폐는 가치척도, 교환수단, 지불수단, 가치저장 수단 등의 기능을 한다.

사회주의 화폐 또한 이러한 화폐의 기본적인 정의와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와 크게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 경제체제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상품생산과 교환 및 그에 따르는 화폐유통이 고도로 발전한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화폐경제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에서 화폐는 공산주의단계에 이르면 폐지될 ‘과도기적’ 경제범주로 간주된다.

“화폐는 사회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발생하였다가 그 존재의 객관적 기초가 사라짐에 따라 점차 없어지게 되는 경제범주이다. 결코 영원성을 띤 경제범주가 아니다. ... 상품화폐관계의 경제적 기초를 생산물에 대한 소유의 분화에 찾는 입장에서 볼 때 여러 생산방식에 걸쳐 존재해 온 상품화폐관계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끝나면 없어진다는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sup>3</sup>

실제로 프루동, 오언 등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노동화폐를 통해 상품화폐관계를 해소하려고 시도하였으며,<sup>4</sup> 볼셰비키 혁명 직후 사회주의자들은 화폐를 상

<sup>2</sup> 사회주의에서 화폐의 규정은 맑스(K. Marx)의 이론에 입각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 가치, 가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품은 자가소비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물건으로서, 상품생산은 사회적 분업과 소유의 분화를 전제한다. 가치는 상품에 들어있는 상품생산자들의 노동이 그 생산물에서 표현되는 형태로서, 가치의 크기는 상품생산에 지출된 사회적 필요노동량에 의해 규정된다. 가격은 이러한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이다.

<sup>3</sup> 리원경, 『사회주의 화폐제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886), pp. 9~10.

<sup>4</sup> 상품가치의 크기는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고 가치는 직접적으로 노동시간으로 측정된다는 데서 금을 화폐로 사용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화폐단위로 하여 교환한다는 생각에서 J.그레이, P.J.프루동, R.오언 등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그레이는 상품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대한 중앙은행의 조사를 기초로 은행의 창

품으로 대체하여 국영기업들간의 모든 화폐단위의 결산을 폐지시키고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시책을 시도한 바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혁명으로 사적 소유를 폐지했다 하더라도 화폐를 폐지할 수 없었다. 화폐(또는 가격) 이외에 노동시간이나 추상적인 가치로 경제계획을 작성하고 운영할 수 없었고 여전히 상품생산과 교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화폐를 완전히 폐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에서의 화폐 유통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화폐의 폐지는 공산주의단계의 과제로 미루어 놓게 되었다. 즉, 모든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 생산되고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공산주의단계가 도래하면 상품생산과 교환은 폐지되며 그에 따라 화폐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에서는 화폐를 부정되어야 할 경제범주로 보는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숭배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는 어느 상품이든 구입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을 지니고 있어, 사람들의 삶을 위한 수단의 자리에서 벗어나 사람의 머리 위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맑스(K. Marx)의 화폐의 ‘물신성’이라는 개념일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적인 생산체제 아래에서는 인간의 노동생산물인 화폐라는 물질이 마치 고유한 힘을 지니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화폐를 신앙 또는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 이에 무릎을 꿇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물신숭배라 하고,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일상적 종교가 되어 있다고 한다.<sup>5</sup>

한편 사회주의에서는 국가에 의해 전반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기업들은 국가로부터 자재와 자금을 공급받으며 계획생산량을 달성하면 그만이다. 판매도 이미 계획단계에서 대부분 보증되어 있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팔릴 것

---

고(상품창고)와 은행권(노동화폐) 발행 제도에 의한 공정한 상품생산을 생각하였다. 이 구상은 오언에 의해 협동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 실행에 옮겨져 1832년 노동화폐로 노동생산물을 교환하는 국민평형노동교환소가 창설되었으나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상품생산에서 사적노동(私的勞動)이 직접 사회적 노동으로서 표시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주장이다.

<sup>5</sup> 자세한 내용은 Marx, 김수역 역, 『자본론 1』 (서울: 비봉출판사, 1991) 참조. 맑스의 물신성 이론은 포이에르바하의 종교철학적 소외이론이 경제학의 분야로 이전된 것으로서(I. I. Rubin, 함상호 역, 『마르크스의 가치론』 (서울: 이론과 실천, 1989), p. 88), 포이에르바하는 인간에 의해 창조된 신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본 것을 맑스는 신 대신에 화폐를 대체하여 인간에 의해 창조된 화폐가 인간을 지배한다고 본 것이다.

인가 안 팔릴 것인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즉 사회주의 기업은 자본주의 기업처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동기가 없다. 주민들도 국가에 의해 식량, 주택, 교육, 의료 등이 보장되고 소득수준이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처럼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사회주의 기업과 주민들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에서는 돈 대신에 국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등과 같은 정치지도자가 주민들의 의식과 행위를 지배하고 통제하게 된다. 사회주의에서 물질적 인센티브 대신 지도자의 이념과 의지 등이 반영된 정치도덕적인 인센티브에 의해 생산을 독려하고 사회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에 비해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가 훨씬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 왔다. 특히 1967년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체계로 하는 전일화된 사회로 바뀌면서 교육과 문화예술의 방향은 최고지도자의 사상과 의지를 관철하는 데 두어졌다.<sup>6</sup> 김일성의 교시는 모든 문헌에서 ‘수령교시’로써 고딕으로 인용되고 여기에서 벗어난 해석과 서술은 용납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김일성과 김정일은 공공장소에서 심지어는 모든 가정에서 ‘어버이수령’으로서 북한주민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에서 지도자와 주민의 관계는 김정일이 정리한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sup>7</sup> 그에 따르면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로서 마치 생명체의 여러 부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리적인 요구가 뇌수에 반영되고 뇌수는 그 요구를 집대성하고 그것을 정확히 반영하는 존재로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육체적인 생명은 끝이 있지만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속된 인민대중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의 “하느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삶”에서 하느님을 수령과 대체하면 다를 게 거의 없다.<sup>8</sup> 이처럼 사회주의에서는 화폐에 대한 물신숭배 대신 지

<sup>6</sup> 수령은 문화예술의 최고의 수요자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꽃파는 처녀』, 『피바다』 등의 북한 최고의 작품을 창작한 천재적인 문예창작자로서 등장하기도 한다. 『조선대백과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460.

<sup>7</sup>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6.

<sup>8</sup>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4), p. 435; 임영태, 『북한 50년사 2』 (서울: 들녘, 1999), p. 17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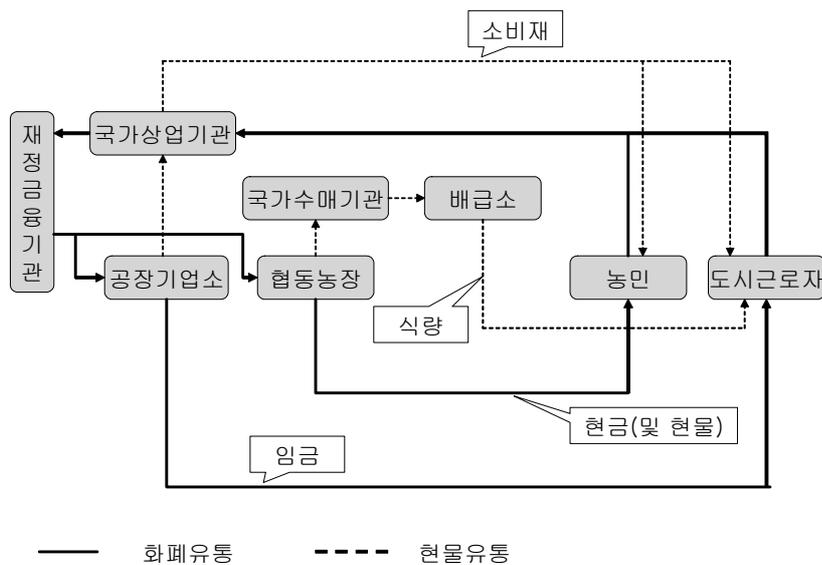
도자에 대한 이상송배가 지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 2. 화폐의 유통

사회주의에서 화폐는 경제관리를 위해 계획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그 유통영역이 매우 제한되었다. 북한에서 화폐는 주민과 국가 및 협동단체, 기관, 기업소 사이에 소규모 지불거래와 상품유통을 매개하여 주민들 상호간의 상품거래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sup>9</sup> 즉, 화폐는 임금지급과 소비재 거래 등 소액 현금 지급에 국한되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북한에서 화폐가 어떻게 유통되고 관리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공장·기업소의 근로자와 사무원은 노동의 대가로 ‘생활비’(임금)와 식량배급을, 협동농장의 농민은 현금 및 현물분배를 받았다.

<그림 1> 북한의 화폐유통체계



소비재 유통의 경우, 근로자와 농민은 근로소득으로 공장·기업소가 생산하

<sup>9</sup> 리원경, 『사회주의 화폐제도』, p. 141.

고 국가상업망을 통해 판매되는 소비재를 구입하게 되며, 국가상업망은 판매한 수익금을 재정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되고 이는 다시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생산 및 운영자금으로 배분된다.

식량 유통의 경우, 농민들은 협동농장에서 현물의 형태로 직접 분배를 받으며 도시근로자의 경우는 배급소에서 매우 낮은 가격으로 배급을 받는다. 식량배급은 보통 식량사정이 어려울 때 나타나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통제 수단일 뿐 아니라 도시근로자의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결국 근로자나 농민 모두 현금 뿐만 아니라 현물(주로 식량) 형태로 노동의 대가를 취득한다. 그러나 최근 식량배급은 크게 줄었으며 배급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돈을 주고 식량을 구입해야 한다.

생산재 유통의 경우는 국가기업소들 사이에 거래되는 것으로서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과 다른 ‘상품적 형태’로 취급되고<sup>10</sup> 거래에 있어서도 무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생산재의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장·기업소가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상의 차감결재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산재도 시장에서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 북한에서 화폐는 임금지급과 소비재 거래에 국한되어 사용되었다. 그런데 소비재 중에서도 식량과 일부 생필품이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달리 장기간 배급제로 공급되어 왔기 때문에 현금 유통영역은 더욱 제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북한경제는 화폐경제와 대비되는 현물경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북한 화폐제도의 변천

#### 1. 1947년 화폐개혁

1947년 화폐개혁은 북조선인민위원회 법령 30호에 의거 1947년 12월 6~12일, 7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일제시대에 발행되었던 구조선은행권과 ‘붉은군대

<sup>10</sup> 생산수단이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는 생산수단의 거래는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으며 자유거래가 아니라 국가의 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반면 생산수단이 상품적 형태를 띠는 이유는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이용권과 관리권이 이전되고 화폐를 매개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김일성저작집 2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457; 『경제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47~48.

사령부'에 의해 발행된 소련군 군표가 북조선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된 「북조선중앙은행권」의 신권과 1:1 비율로 교환되었다. 이때 발행된 신권은 1원, 5원, 10원, 100원권 4종이었다.<sup>11</sup>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화폐개혁의 동기는 민주개혁과 자주적 화폐제도 수립(재정적 독립)에 있다. 북한문헌에 따르면, 1947년 화폐개혁은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재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또한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반동들의 파괴책동을 짓부수고 … 자립적인 민족경제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sup>12</sup>

당시 화폐개혁의 동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1947년 화폐개혁은 신규화폐의 교환비율을 1:1로 정했지만 소유형태에 따라 화폐교환의 한도에 차별을 둬으로써 상공업자, 종교집단 등의 화폐자산을 몰수하였다<sup>13</sup>(<표 1> 참조). 이러한 조치는 토지개혁(1946.3), 국유화령(1946.8) 등에 이은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유산계급의 물적토대를 최종적으로 박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표 1> 1947년 화폐개혁에서의 계층별 화폐교환 비율

(단위: %)

계층별	상공업자 I	상공업자 II	노동자/사무원	연금생활자	농민	학생	종교단체
교환비율	21	54	74	43	69	82	8

주: 상공업자 I 은 10명 이상의 노동자·사무원을 고용하는 경우, 상공업자 II는 10명 이하를 고용하는 경우, 기타는 이상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집단을 나타냄.

출처: 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전현수, “1947년 12월 북한의 화폐개혁,” p. 207 참조.

이에 대해 주민집단의 대응은 상이했다. 노동자·사무원, 농민 등 근로계층은 화폐개혁에 적극적으로 응한 반면, 상인, 중소상공업자들은 비협조적이거나 적대적으로 응했다. 토지개혁, 국유화, 화폐개혁 등 일련의 ‘민주개혁’으로 노동자

<sup>11</sup> 한편 일제시대 때 발행되었던 보조화폐는 이후에도 계속 통용되었으나, 1949년 5월 14일 내각결정 50호에 의거, 소액지폐 15전, 20전, 50전권의 지폐가 발행되면서부터 이들의 유통은 무효화되었다.

<sup>12</sup>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 1261.

<sup>13</sup> 이와 함께 교환한도를 초과하여 예치된 예금의 지불방법과 한도 또한 차등적으로 적용되었다.

와 농민들은 지주와 친일세력의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었다. 또한 이러한 민주 개혁으로 김일성과 공산당은 대중적 기반을 결정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었다. 당시 대표적인 작품인 리기영의 『개벽』은 이러한 주민들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sup>14</sup>

“토지를 농민들에게 값없이 나누어준다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 실로 이것은 고금에 처음 듣는 말이다. …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땅 평이가 떠나갈 줄은 몰랐다. 친지개혁을 하기 전에야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토지개혁이란,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개혁을 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 세상을 뒤집어엎었다.

반면, 상인들 사이에서는 “노동자들은 노동법령을, 농민들은 토지를 획득했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획득했는가. 우리는 모두 끝장이다”는 비탄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또한 일부 유산계층과 교회목사들은 화폐개혁을 보이코트하라는 호소문을 살포하거나 화폐개혁 지지집회를 결렬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련군 주둔 하에서 유산계층의 영향력은 너무도 미약했다.

둘째, 자주적인 화폐제도 수립과 관련하여 북한은 각종 화폐(구조선은행권과 소련군표)의 유통과 남한에서 가치저하된 조선은행권의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자주적인 화폐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화폐교환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sup>15</sup> 그러나 1946~47년 남북간 교역규모가 북한무역의 7%에 불과했음을 감안해볼 때 보다 주된 이유는 당시 기본통화로 기능하고 있던 소련군표의 문제점 해결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소련정부는 소련군의 주둔경비를 정부 예산에서 충당하지 않고 소련군사령부 군표를 발행함으로써 해결하였다. 군표는 1945년 9월 21일부터 1:1의 환율로 구조선은행권과 공히 통용되었으며, 1947년 화폐개혁 직전에는 72억엔으로 북한 유통화폐량의 90%를 상회할 정도로 증가하였다.<sup>17</sup> 당시 화폐발행의 증가는 전

<sup>14</sup> 리기영의 『개벽』, 『한국소설문학대계 10』, (서울: 동아출판사, 1995). 참고로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전체 농가의 4%에 불과한 지주가 총 경지면적의 58.2%를 차지하고, 농가의 56.7%에 달하는 빈농이 경지면적의 5.4%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소작인들은 지주에게 소작료로 수확량의 70~80%정도를 바쳐야 했다. 따라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분배하는 토지개혁은 대다수 농민들에게 ‘평생 제일 큰 행복’이었다.

<sup>15</sup> 당시 북한당국이 발행한 화폐개혁 관련 호소문이나 선전요강을 보면, 남조선이 조선은행권과 위조지폐를 ‘침입시켜’ 시장을 혼란케 하고 물가를 폭등시켜 대중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폐교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up>16</sup>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현수, “1947년 12월 북한의 화폐개혁,” 『역사와 현실』 (서울: 역사와 비평사, 1996) 참조.

적으로 군표발행에 기인하는데, 이는 물가를 폭등시키고 주민 생활수준을 저하시킴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소련군사령부는 1947년 6월 군표유통을 중단시키되 소련군이 회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교환해준다는 조건하에서 화폐개혁을 제안했다. 화폐교환의 결과를 보면, 북한측이 교환에 회부한 구화폐는 71.2억엔으로서 이중 35%만 교환되었는데 반해 소련측이 교환에 회부한 금액은 9.3억엔으로써 100% 교환되었다.

이처럼 화폐개혁으로 유산계층의 화폐자산을 수탈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평등의 토대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폐자주권을 획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소련주둔군 비용을 소련정부 대신 북한정부가 떠안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화폐개혁은 해방 이후 토지개혁, 국유화령 등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던 남북한을 두 개의 화폐경제권으로 분리시킴으로써 남북한 경제의 이질화를 심화시켰다.

북한의 화폐도안은 교육 및 문화예술이 그러하듯이 당시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토지개혁, 국유화 등 일련의 ‘민주개혁’으로 물질 토대가 지주와 자본가로부터 농민과 노동자로 이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당시 노동자와 농민들은 시대의 주인으로 설 수 있었다. 1947년 북한 화폐는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세종대왕, 율곡 등 역사적 위인이 등장하는 우리의 화폐와 달리 망치를 든 노동자와 쇠스랑을 든 농부가 화폐에 등장한 것이다. 더욱이 이들 노동자와 농부는 새로 발행된 1원, 5원, 10원, 100원 등 모든 화폐에 등장하고 있다.

## 2. 1959년 화폐교환

1959년 화폐교환은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데 대하여」라는 내각결정 11호에 의거 2월 13~17일, 5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화폐교환은 교환한도를 두지 않고 구화폐 「북조선중앙은행권」 100원에 대하여 신화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은행권」 1원의 비율로 교환되었다. 새롭게 발행된 신권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표시의 은행권 50전, 1원, 5원, 10원, 50원, 100원의 6종과 소액 주화 1전, 5전, 10전의 3종이다.

1959년 화폐교환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자립적 민족경

<sup>17</sup> 1947년도 유통되었던 군표 72억엔은 동년 세출액 83.4억엔의 86%에 달했을 정도로 막대한 규모를 보였다.

제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어 화폐의 안정성이 강화된 조건에서 우리나라에 수립된 자립적 화폐제도를 공고히 하며 유통과 계산의 편의를 더 잘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sup>18</sup>

북한의 1959년은 1958년 농업과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었으며 전후 복구가 마무리되고 북한의 경제발전과정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시현했던 시기였다. 그로 인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였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는 ‘천리마운동’(1956.12)과 강선제강소에서 발기된 ‘천리마작업반운동’(1959.3) 등 집단적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이 전개되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이 시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0%를 웃돌았으며, ‘머지않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표명되기도 하였다.<sup>19</sup> 그로 인해 공업생산물원가가 매년 10% 정도 하락하였으며 물가가 1953년부터 1958년까지 7차레나 하락하여 북한 화폐의 구매력은 크게 높아졌다.

그에 따라 높아지는 화폐의 구매력 증가에 맞게 가격기준을 변동시킴으로써 화폐액면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고성장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와 함께 경제적 성과를 화폐교환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된다.<sup>20</sup> 100:1의 화폐교환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고액권 100원을 유지한 것은 고도성장에 대한 낙관과 그에 따른 고액권에 대한 수요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1959년 화폐개혁의 동기는 1947년의 그것과 대비된다. 1947년 화폐개혁이 과거 일제 및 소군정하의 화폐제도의 부작용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화폐제도의 확립을 지향하였다면, 1959년의 화폐교환은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가격기준을 바꿈으로써 북한 화폐의 대내외적 위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1947년의 화폐개혁과 달리 1959년 화폐교환은 가격기준 변동을 주 내용으로 할 뿐 주민들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

<sup>18</sup> 리원경, 『사회주의 화폐제도』, p. 192.

<sup>19</sup> 발전량, 석탄, 철광석, 등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북반부는 사회주의공업-농업국으로서 확고한 토대를 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 중요한 공업제품의 인구 1인당 생산에서 일본을 이미 거의 따라 잡았거나 혹은 앞서고 있습니다” 김창만동지(함경남도 당단체 대표)의 토론, 국토통일원, 1988, p. 183.

<sup>20</sup> “새 화폐의 발행은 미제강점하의 남조선에서 인플레이가 격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진행된 것만큼 전체 조선인민앞에 사회주의적 화폐제도의 우월성과 자본주의 화폐제도의 취약성을 뚜렷이 밝혀놓았다. 그러므로 신규화폐교환은 남반부 인민들에게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동경심을 더욱 두텁게 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놀 수 있었다.” 리원경, 『사회주의 화폐제도』, p. 206.

는 무차별·무제한 교환방식으로 나타났다.

새로 발행된 화폐에는 당시 사회주의 건설의 열기와 미래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 1956년 12월에 시작된 천리마운동은 이후 북한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천리마시대의 전형적인 인간상은 공산주의라는 ‘미래의 낙원’을 위해 ‘오늘의 땀’을 흘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당시 대표적인 오영재의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sup>21</sup>

아름답다,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는 아름다워라/네가 손으로 하던 일들이/모두 기계로 대신하게 될 때/더 좋은 해들이 너를 맞아주고/너를 안고 조국이 달려가는 미래의 낙원에서/너는 더 행복한 화원을 가꾸게 될 것이다/그 때면 그 꽃을 너에 비기며/사람들은 더 아름다운 노래를 너에게 불러줄 것이다.

당시 새롭게 발행된 화폐에는 ‘과일따는 여인’(10원)과 ‘추수하는 여인’(50원)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환하게 웃는 표정은 여느 때 북한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표정보다 밝고 건강미가 넘친다. 이들의 표정은 1947년도 발행된 화폐에 등장하는 노동자와 농부의 엄숙하고 경직된 표정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58년 농업 및 상공업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로 적대적 갈등이 사라졌기 때문에, 공산주의적 인간의 전형은 적대적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되고 ‘서로 사랑하는 고상한 공산주의적 풍모’를 가진 인간형으로 그려야 한다는 문예사조를 반영하는 것이다.<sup>22</sup>

### 3. 1979년 화폐교환

1979년 화폐교환은 1979년 4월 6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의거 1979년 4월 7~12일, 6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구화폐는 신화폐와 1:1 비율로 교환되었으며 1959년 때와 마찬가지로 교환한도를 정하지 않고 낡은 화폐 전량을 새 화폐로 바꾸어 주었다. 새롭게 1원, 5원, 10원, 50원, 100원권의 은행권이 발행되었다. 유통의 편의를 위하여 50전 주화를 새로 발행하였고 종전의 1전, 5전, 10전화는 디자인을 바꾸지 않고 계속 통용시켰다.

<sup>21</sup> 윤재근·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2)』 (서울: 고려원, 1990), p. 281.

<sup>22</sup> 노귀남, “문학속에 나타난 북한의 경제관,” 『북한의 경제』 (서울: 한울, 2005), p. 255.

그러나 교환내용을 보면 교환은 1회에 한하며 교환할 때 일부 및 전부를 저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1979년 4월 6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구화폐를 1979년 4월 8일까지 은행에 입금시켜 필요한 금액만을 신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처럼 1979년 화폐교환에서는 교환한도를 두지 않았으나 저금을 적극 권장 또는 강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북한은 1979년의 화폐교환의 동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화폐의 도안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을 따름이다. “새 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으로 높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을 반영하여 그이의 존귀하신 영상을(100원권에) 정중히 모시도록 하였으며 혁명의 요람, 우리 혁명의 뿌리, 주체, 천리마, 3대혁명 그리고 주체조선의 자랑찬 현실과 찬란한 미래를 조화된 전일적인 체계를 갖추고 형상하도록 하였다.”<sup>23</sup>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적인 설명과 도안을 통해 1979년 화폐교환이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당시 김일성 개인숭배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보면, 북한은 1967년 5월 이후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의 확립을 명분으로 개인숭배가 대폭 강화되었다. 이때부터 북한사회에서 모든 의식은 김일성에 대한 찬양으로부터 시작하였고 대중학습은 김일성의 혁명활동 암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언론은 김일성의 위대성을 증명하는 것을 자신의 제1의 무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이상화는 우민화를 수반하였는데, 대표적인 예가 양서의 말살이었다. 1967년 이후 70년대 중반까지 ‘도서정리사업’으로 체제와 수령 찬양의 정치서적, 그리고 수령님 노작과 교시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책들이 제지공장으로 실려 갔다.<sup>24</sup>

<sup>23</sup> 『경제사전 2』, p. 603.

<sup>24</sup> 북한에서 5.25교시는 좌경극단주의에 의한 북한판 문화혁명이라 할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이 사건은 우민화 및 침묵의 문화를 촉진했다고 할 수 있다. “북조선사람들은 모두가 ‘60년대까지는 살기 좋았다’고 말한다. 정확히 말한다면 5.25교시 전까지는 북조선은 그래도 사회주의 인민의 나라였다. 그러나 5.25교시를 계기로 계급투쟁과 프로독재의 강화, 수령 이상화의 심화, 인텔리 혁명화를 몰아치는 가운데 사회전반에 극좌적인 바람이 불어닥쳤다. ... 나에게 가장 큰 의문을 던진 것은 책의 말살이었다. 5.25교시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된 도서정리사업은 거의 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전국의 모든 가정, 모든 직장의 책 페이지가 일일이 검열되는 방대한 캠페인이었다. ... 직장마다 제지공장으로 실려나가는 책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한 마디로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양서였다. 남은 것은 체제와 수령 찬양의 정치서적, 그리고 수령님 노작과 교시집이었다.” 성혜랑, 『등나무집』 (서울: 세계를 간다, 2001), pp. 312~414.

김일성우상숭배 캠페인을 주도했던 인물은 김정일이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곧바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노동당, 정부, 군을 장악해갔다. 또한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까지 격상시켰고 그의 가계 전부를 신화화했다. 이러한 우상화의 과정은 김일성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1980년 6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일 후계체계가 공식적으로 천명되었으며 이후 그는 김정일은 김일성과 함께 공동으로 북한을 통치하게 되었다. 1984년에 김일성은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이 나에 대한 충실성”이라 했고 “현 시대는 김정일 시대”라고 선언할 만큼 김정일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었다.<sup>25</sup> 또한 이러한 정치구조의 변화는 문화예술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김일성과 김정일을 대등하게 놓은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김철의 『백두의 새날』(1982)에서는 ‘두 필의 준마’, ‘두 태양’으로 그들을 표상하고 있다.<sup>26</sup>

오, 백두야 조선의 산아 말하라/언제 어느 아침에 두 필의 준마/천지의 맑은 물로  
 목을 추기고/영광의 만리길을 다시 이어갔더냐//네 그날부터/두 태양을 함께 모시었  
 나니/조선의 어제와 오늘과 래일이/네 우에 함께 빛나도다 백두산!

1980년 6차 노동당 대회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대내외적으로 공개됨과 동시에 김일성·김정일의 공동통치시대가 개막되는 중요한 당 대회였다. 따라서 1979년의 화폐교환은 김일성을 우상화하면서 김정일 후계체계를 공고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79년 화폐교환은 1959년 화폐교환과 달리 저금을 강제 또는 권장했던 것으로 보아 유희화폐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유희화폐를 회수하게 된 데에는 경제가 악화되면서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북한은 1976년 서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사태(default)에 놓이게 되었고 제1차 6개년 경제계획(1971~76년)을 1년 연장하여 1978년부터 새로운 제2차 7개년 경제계획(1978~84년)에 들어설 만큼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다. 물론 1978년부터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1978, 79년에는 예외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1980년 이후 다시 침체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sup>27</sup>

1979년 화폐교환에서는 내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화폐와 외국인이 사용

<sup>25</sup>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영태, 『북한 50년사 2』, 8, 9장 참조.

<sup>26</sup> 윤재근·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2)』, p. 307.

<sup>27</sup>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에 대해서는 이영훈,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지속과 변화,” 『탈냉전기 한반도와 주변4강』 (서울: 매봉, 2004) 참조.

할 수 있는 ‘외화와 바꾼 돈표’라는 특수화폐를 발행하여 이원화시켰다. 그에 따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의 명칭이 들어있는 1원, 5원, 10원, 50원, 100원권 등 5종의 일반 통용은행권과 50전 주화 1종 이외에, ‘외화와 바꾼 돈표’ 1원, 5원, 10원, 50원권 4종을 별도로 발행하였다. 일반통용권과 외화와 바꾼 돈표를 비교해보면, 1원, 5원, 10원, 50원권의 도안은 동일하지만 외화와 바꾼 돈표에는 김일성 초상이 들어있는 100원권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이처럼 ‘외화와 바꾼 돈표’를 새롭게 발행한 이유는 1970년대 들어 북한이 서방선진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고 차관을 도입하는 등 자립경제노선을 완화하면서 유입되는 외화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화폐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1988년 조선중앙은행 산하 무역은행은 그간 중앙은행에서 담당하여 오던 ‘외화와 바꾼 돈표’의 발행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역은행」 표시의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하였다.

#### 4. 1992년 화폐교환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 정령(1992.7.14)에 의거 7월 15~20일 동안 4번째 화폐교환을 단행하였다. 새로 1원, 5원, 10원, 50원, 100원권이 발행되었으며 구화폐와 1:1 비율로 교환되었다. 새로 발행된 화폐에는 천리마운동, 주체사상, 김일성 등 1979년 발행된 화폐의 기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등장인물과 서해갑문, 주체사상탑 등의 건축물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사상탑(1982), 서해갑문(1986) 등의 대형 건축물들은 1980년대 김정일의 지도에 의해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 그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해 자신의 배짱과 정치적 지도력을 과시하고자 했다. 따라서 새롭게 발행된 화폐에는 직접적으로 김정일이 등장하지 않았으나 김정일이 주도한 건축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김정일의 업적을 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92년 화폐교환은 교환의 한도를 강력하게 제한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교환한도를 1가구당 399원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금 후 지불하도록 하였고 30,000원 이상은 저금마저 불허하였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도 필요한 만큼만 교환하게 하였다. 당시 노동자의 1달 평균임금이 100원이었음을 고려하면 교환한도를 가구당 399원으로 정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실질

적으로 교환한도 이상의 주민소득이 국가재정으로 이전됨과 동시에 주민들의 소득평준화를 낳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자율이 낮은 데다 예금인출이 매우 어려워 일부 주민들은 어렵게 모았던 돈을 강물에 버리거나 불에 태워버리기도 했다. 또한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북한 화폐보다 유사시에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치가 안정적인 외화나 귀금속 등을 선호하게 되었다.<sup>28</sup>

그런데 이처럼 파격적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는 시장경제 확산에 따른 부작용 차단과 국가재정 확충에 있었으며, 그 외 일부 부유계층의 화폐 회수 등에 있었다고 판단된다.<sup>29</sup> 1992년 화폐교환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1980년대 말부터 외부로부터의 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공급부족이 심화되었다. 그로 인해 공장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주민들은 국영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농민시장에서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들을 구입하여야 했다. 당시 생필품의 가격이 국정가격보다 5~10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으며, 거래금지 품목인 식량 또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당시에는 주민들이 생필품들을 국영상점 대신에 시장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돈이 국가로 환류되지 않고 시장에서 유통되었고, 그 결과 국가재정은 점차 줄게 되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괴리를 이용하여 낮은 국정가격으로 구입하여 높은 시장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큰 매매차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북한정부는 1991년 비사회주의 현상의 차단이란 명분으로 농민시장을 단속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공급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단속하는 조치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에 따라 북한정부는 화폐교환을 통해 교환한도 이상의 화폐를 국가로 환수함으로써 재정을 확충하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폐량을 축소시킴으로써 시장경제의 확산을 차단하는 결과를 기대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화폐교환을 통해 화폐유통량을 줄인 만큼 물가가 하락하지는 않았으며 경제가 호전되지도 않았다. 때마침 자연재해로 인해 공급부족의 문제가 심화

<sup>28</sup> 국가안전기획부, 『최근북한실상』, 1994.4. 참조.

<sup>29</sup> 당시 사람들은 장사하느라 은행에 돈을 넣지 않아 국고가 텅 비어있던 상태였다. 1992년 당시 은행에 돈이 없어 노동자들의 임금도 3달 이상 밀렸지만, 중국 화교들과 재일교포 집에는 은행보다 많은 돈이 적축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없을 정도였다. 당시 북한 당국은 화교와 돈 많은 사람들을 목표로 개혁을 실시했지만 결과적으로 목표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돈 없는 노동자들과 한 푼씩 모은 사람들만 줄지에 휴지조각을 쥐게 되었다. 『The Daily NK』, 2005년 5월 3일.

되면서 1995~97년의 ‘고난의 행군’기 동안 쌀값이 4~8배 정도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물가는 크게 인상되었고 1998년에는 500원권이 새로 발행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선군정치를 앞세운 경제관리,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 등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나 공급부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으며 자생적으로 확산되는 시장경제의 진전을 막을 수 없었다.<sup>30</sup>

마침내 계획경제의 위축과 시장경제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2002년 7월 1일 시장경제를 적극 수용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를 단행했다. 북한은 ‘7·1조치’를 통해 국정가격을 평균 25배 정도, 임금수준을 평균 약 20배 인상하여 1인당 임금수준을 월 2,000원 정도로 책정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큰 폭의 국정가격과 임금의 인상은 낮은 국정가격과 높은 시장가격간의 차이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sup>31</sup> 즉, 공급부족이 심화되면서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가 점차 벌어지게 되었고, 주민들은 국정가격으로 국가물자를 빼돌려서 농민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반면 정부는 국정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는 기업소 단위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을 지속해야 했다. 그로 인해 계획경제가 위축되고 시장경제가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 경제를 정상화시키고자 가격을 현실화한 것이다.

한편 가격현실화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인플레이션을 뒤늦게 공식적으로 인정할 셈이 된다. 북한에서는 지속적인 물가하락을 사회주의 ‘법칙’적 현상으로까지 규정해왔기 때문에 20배 이상의 물가인상은 국가 권위의 실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화폐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000원, 5,000원권 등 고액권 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에는 200원권을 새롭게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국정가격 및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그에 따른 화폐발행의 증가는 7·1조치 이후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sup>30</sup>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제17권 2호(2005) 참조.

<sup>31</sup>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전망: 가격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은행, 2005) 참조.

## IV. 화폐경제로의 이행

### 1. 시장경제의 진전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비효율이 누적된 데다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사실상 소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북한경제는 전반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경제생활에 토대가 되는 식량·에너지·원자재난이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장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1990~98년 동안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는 국가의 재정을 고갈시킴으로써 계획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하였으며 가계와 기업에 대해 ‘자력갱생’을 강요하게 되었다. 우선 북한정부는 제3차 7개년 경제계획(1987~93년) 이후 경제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식량 및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자 개인생산과 상거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 근로자의 임금은 ‘생활비’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식량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성인 1일 600g 정도 배급되었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히 줄었다. 그에 따라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해야 하나 1달 임금으로는 쌀 2kg 정도밖에는 구입할 수 없었다(<표 2> 참조). 물론 쌀의 1/2~2/3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는 옥수수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1달 임금으로는 성인 1인의 1주일 식량조차 구입할 수 없었다. 더욱이 1992년 초에는 김정일이 “국가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상노임의 60% 수준을 유지하라”고 할 정도로<sup>32</sup> 노동자의 임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아예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sup>32</sup> 국가안전기획부, 『최근북한실상』, 1994.4.

## &lt;표 2&gt; 북한의 임금, 식량배급, 쌀 가격 추이

	1980년대	1992	1995	1998	2001	2004
임금(원/월)	70	100	100	100	100	2,000
근로자 식량배급(g/일)	600	492	0	-	197	300
쌀의 배급가격(원/kg)	0.08	0.08	0.08	0.08	0.08	45
쌀의 시장가격(원/kg)	-	20	80-200	77	49.5	900

출처: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p. 49.

공장·기업소의 경우도 국가로부터 자금 및 물자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물자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8.3작업반, 부업지경작, 외화벌이 등 계획외의 경제활동<sup>33</sup>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자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그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군수공장, 수출기업소, 주요 기간산업의 공장·기업소 등을 제외하고는 공장·기업소 차원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가 뿐만 아니라 공장·기업소로부터 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주민들은 사경제활동을 통해 생계수단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특히 식량배급이 중단되어 아사자들이 급증하는 ‘고난의 행군’기(1995~97년)에 현저해졌다.

“살 구멍 찾기 위해 장마당 나가야 하고, 장사할 밑천이 없으면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서 팔아야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굶어죽어요. 아침에 장마당에 나가면 길 옆에 죽은 사람 가득해요.”<sup>3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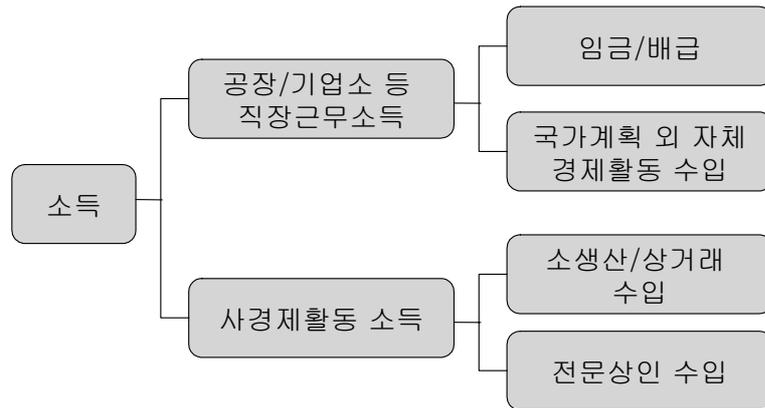
시장활동과 연계된 주민들은 개인 생산물을 시장에 직접 내다파는 소생산자와 타인 생산물을 구입하여 되파는 전문상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개인

<sup>33</sup> ‘8.3작업반’활동은 공장의 폐자재를 이용하여 신발, 의류, 공책 등의 소비재를 생산하고 직매점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수입을 거두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부업지경작’은 기업소들이 자체적으로 일정 규모의 농경지를 확보하여 식량을 비롯한 각종 부식물을 생산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외화벌이’는 무역을 통해 조직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얻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데, 1992년대 들어서면 과거와 달리 무역에 종사하지 않던 일반 기업들과 기관들도 외화벌이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왔다.

<sup>34</sup> 탈북자 김00(함북경성 생, 200212 입국)의 인터뷰, 세종연구소, 『북한이탈주민면담록』(2003~2004);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p. 30.

텃밭을 경작하고 자체적으로 두부, 기름, 술, 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람들로써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후자는 주로 쌀이나 수입품을 취급하는 상인들로서 거래규모가 크며 일부는 수입한 원자재를 자신이 운영하는 생산조직에 제공하여 생산된 물품을 내다파는 경우도 있다.

<그림 2> 북한주민의 소득 유형



이처럼 국가의 식량 및 생필품배급과 생산재공급이 대폭 줄면서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 그리고 생산재 등을 시장에서 현금으로 구입하여야만 했기 때문에 화폐 유통은 크게 확대되었다.

2002년 1월에는 생산재를 거래하는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이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소비재 뿐만 아니라 생산재도 시장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더 나아가 2002년 ‘7·1조치’를 통해 “이제부터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탄 생활비로 생활, 절대로 공짜·평균주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가부담에 의한 가격보조의 폐지,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불되는 임금 및 각종수당을 폐지하였다. 이는 국가의 도움 없이 자기의 노동에 대가로 벌어들인 화폐소득에 기초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용상 현물경제에서 화폐경제로 이행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북한정부는 시장을 합법적인 상품유통체계의 하나로 인정하여 2003년 3월에는 ‘종합시장’을 개설함으로써, 과거 통제대상이었던 농민시장을 자본주의 상설시장 형태의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에 의해 상거래와 개인생산이 확대되는

‘자생적 시장화’ 과정을 거쳐 왔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경제는 현물경제에서 화폐경제로 이행하고 있다.

## 2. 화폐기능의 확대

북한경제가 현물경제에서 화폐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화폐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① 가치척도로써 과거 북한 화폐는 “생산물의 가격과 원가를 계획”하는 기능을 했다. 국가의 가격기구인 생산물에 투입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며, 예외적으로 사회주의 우월성을 시현하기 위해 대중 소비품은 낮은 가격으로, 사치재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쌀의 배급가격은 1kg당 8전으로서 실제 (암)시장가격에 비해 수백배의 낮은 가격을 유지해왔다(<표 2> 참조).

이와 더불어 화폐는 통제의 기능을 했다. 국가의 재정·금융기관은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재정지출 또는 은행대출을 통해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이를 ‘원에 의한 통제’라고 한다. 이러한 가치척도 및 통제의 기능을 토대로 국가계획기관은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계획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시장경제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계획기구에 의해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을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미 쌀을 비롯한 소비재의 대부분은 시장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일부 생산재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원에 의한 통제’는 북한재정의 축소로 인해 재정통제 대신 은행통제로 대체되고 있다. 은행통제는 수익이 나는 공장·기업소에 한해 대출이 되고 있어 실질적 의미에서 ‘원에 의한 통제’는 과거에 비해 엄격해진 편이다.

② 과거 교환수단으로써 북한 화폐는 제한된 기능을 하였다. 사회주의하에서 ‘상품’인 소비재의 거래는 ‘현금거래’로 하고 ‘상품적 형태’를 띠는 생산수단의 거래에서는 ‘무현금거래’<sup>35</sup>를 원칙으로 한다. 그로 인해 소비재를 거래하는 경우에 한해 화폐는 ‘교환수단’으로써 기능하여 화폐유통의 범위는 매우 제한되었다.

그러나 소비재 뿐만 아니라 생산재와 식량의 자유거래가 증가하면서 교환수

<sup>35</sup> 무현금거래는 기관, 기업소 상호간에 원료, 자재, 설비 등 생산수단을 구입할 경우 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정간의 차감 결재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단으로써의 화폐기능은 확대되고 있다. 과거 생산재의 기업간 현금거래는 금지되었으나, 국가의 자재공급체계가 와해되면서 생산재의 현금거래가 관행화되어 왔으며 2002년 1월에는 생산재를 거래하는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마저 등장했다. 이와 함께 식량배급 또한 국가로부터의 배급은 거의 중단되었으며 공장·기업소 차원의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동률이 저조한 공장·기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식량배급을 받을 수 없어 나머지 부족한 식량은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③ 지불수단으로써 화폐는 신용거래나 임금과 세금 지불 등에서 나타나는데, 과거 북한에서 지불수단으로써의 화폐 기능은 대부분 노동자·사무원에 대한 임금지급에 국한되었다. 신용거래는 자본주의국가들에서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들에 의한 납세는 1974년 세금폐지를 선언한 이후 1990년대 이전까지 없었다.<sup>36</sup> 그리고 노동에 대한 대가도 일부만 화폐로 지급되고 있다. 농민들의 경우는 현금과 함께 현물로 지급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경우는 임금 외에 식량배급 등의 ‘추가적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sup>37</sup>

그러나 최근 조세가 신설되고 화폐임금 중심의 보수체계가 확립되면서 지불수단으로써 화폐 기능은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농민시장에서 징수되기 시작한 시장사용료(시장 판매매대 사용료)와 장세(상인들에 대한 소득세), 2002년 7·1조치를 계기로 토지사용료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7·1조치를 계기로 북한은 화폐임금 중심의 노동보수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군수공장, 수출기업소, 주요 기간산업의 공장·기업소 등 가동되는 일부 공장·기업소를 제외하면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④ 가치저장수단으로써의 화폐는 기업 및 노동자가 부를 축적하는 데서 나타난다. 과거 북한에서 기업은 국가소유로 되어 있어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저축성향은 매우 낮아 축재수단으로써의 화폐기능은 매우 미약하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저축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축을 해도 되찾기가 힘들어 저축을 기피하고 있다.

<sup>36</sup> 북한은 1974년 4월 주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폐지하였으며 “세계에서 세금 없는 첫 사회주의나라”라고 자부해왔으나 1990년대 들어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시장세를 거두고 있으며 2002년 7·1조치를 계기로 토지세를 신설하였다.

<sup>37</sup> ‘추가적 혜택’의 규모는 시기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통계자료가 남아있는 1950년대 후반의 경우 임금의 70% 수준이었다. “우리 당은 1957년부터 1960년까지의 기간 노동자, 사무원들의 물질문화 생활향상을 위하여 실로 그들의 노임의 70%에 해당하는 추가적 혜택을 주었습니다.” 국토통일원 편,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제2집』 (서울: 국토통일원), p. 227.

최근 화폐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저축성향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의 물가상승, 소지하고 있던 화폐가 휴지화되었던 1992년 화폐교환의 경험, 7·1조치 전후로 야기된 화폐교환 소문 등으로 인해 북한 화폐는 축재수단으로써의 가치는 높지 않다. 오히려 달러나 위엔화 등 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 3. 물신주의의 만연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점차 공장·기업소에서의 계획수행에서 개인생산과 시장에서의 생존경쟁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가치관이 이념 중심에서 돈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미 1990년대에 들어서면 북한에서는 “국정가격과 도덕이 없어졌다”말이 유행했다. 국정가격이 없어졌다는 말은 주민들은 국가상점이 아니라 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말로 계획경제가 그만큼 와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도덕이 없어졌다는 말은 주민들의 가치관이 사회주의 도덕에서 돈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주민들은 “더 이상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것을 바라보면 굶어죽는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당시 생과 사의 기로에 섰던 북한주민들은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것이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돈이었음을 경험했던 것이다. 그들은 “국가에 의지했던 ‘토끼와 양’은 다 굶어죽고 자기 나름의 생계수단을 확보했던 ‘늑대와 송냥이’는 살아남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주민들의 직업관의 변화를 보면, 과거에는 가장 원하는 직업이 당간부, 보위일꾼, 안전일꾼 등이었으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중류층은 무역일꾼이나 상업일꾼을 선호하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위층의 경우는 여전히 당간부를 선호하나, 중류층은 무역일꾼, 상업일꾼, 선원 등을, 하류층은 운전기사, 외화벌이 노동자 등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남녀관계에서도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북한 정부는 비전문직 여성근로자들에 한해 사직을 허용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8·3 자금’이라는 뇌물을 주고 부분적으로 사경제활동을 했으나 비전문직 여성근로자들의 경우는 아예 사직을 하고 사경제활동에 전념할 수가 있었다. 그 결과 일부 여성들의 1일 소득이 남편의 1달 임금에 버금갈 정도로, 여성들이 벌어들

는 소득이 가계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여성들은 열심히 시장활동을 하여 생계를 꾸리는 반면 남성들은 가동되지 않는 공장처럼 돈 못벌고 빈둥거리게 되자 남녀관계가 점차 기울기 시작했던 것이다. 과거 하늘에 비유되던 남편의 지위는 ‘집지키는 멍멍이’, ‘만원짜리 자물쇠’, ‘옷걸이’ 등의 빈정대는 말들이 유행할 만큼 추락하고 있다.

한편 국가의 통제능력이 약화되고 시장경제로 이행하게 됨에 따라 뇌물수수가 일반화되고 있다. 모스(M. Mauss)는 화폐경제 또는 시장경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의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교환관계가 아니라 증여-답례가 일반적인 관계라 했다.<sup>38</sup> 시장경제가 미발달하여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거나 재산권이 분명하게 확립되지 않은 사회일수록 권력자의 재량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커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뇌물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북한에서는 웬만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는 뇌물제공이 필수적이며 당원입당, 탈북, 심지어 사형감면조차 뇌물을 제공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사회의 부패상을 빗대어 노동자는 ‘노골적으로 해먹고’, 당간부는 ‘당당하게 해먹고’, 안전원은 ‘안전하게 해먹고’, 보위원은 ‘보이지 않게 해먹는다’는 말이 유행되고 있다.

북한에서 인기가 있는 뇌물은 외화나 국정가격으로 현물을 제공하는 것인데, 외화는 북한체제의 지속성에 대한 회의감 및 화폐개혁 등으로 북한 화폐가 가치저장의 기능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국정가격으로 현물을 제공할 경우, 이를 농민시장 등에서 암거래가격으로 판매하여 수배의 매매차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sup>39</sup>

그러나 돈을 줄테니 그 대가를 내놓으라는 식의 증여는 부정한 반대급부를 막연하게 기대하게 한다. 권력은 세금징수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는데, 권력의 수하들이 뇌물을 받아 챙기기 시작하면 권력의 뭍이 그만큼 줄어들는다. 그래서 권력이 약한 나라일수록 뇌물수수는 만연하게 된다. 사실상 북한에서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약화되면서 지도자의 명령보다는 개인과 기업 자체

<sup>38</sup> M. Mauss, *Essai sur le don*, 이장률 역. 『증여론』. (서울: 한길사, 2002), p. 193. 사회주의에서 대중필수품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가격결정 원칙은 일면 이러한 증여-답례의 관계가 관철되는 예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저가의 배급을 ‘추가적 시혜’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노동의 대가라기보다 충성으로 보답해야 할 일종의 선물인 셈이다.

<sup>39</sup> 국가안전기획부, 『최근북한실상』, 1995.1.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점차 만연해가고 있다.

1991년의 농민시장 단속, 1998년의 농민시장규제 및 노동자들의 공장복귀조치 등을 통해 시장경제의 확산을 통제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특히 ‘고난의 행군’기를 지나면서부터 정부의 통제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심지어 농민시장에서 안전원이 총을 들고 상거래를 규제해도 주민들이 순응하지 않았으며, 안전원과 주민들과의 충돌 또한 잦았다고 한다.

“법으로 통제하기가 불가능하기 시작한 게 대체로 97년도부터입니다. 97년도에는 안전원들이 총 뽑아 들어도 ‘야, 이 새끼 쓰라. 총에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같으니까 죽여라. 맘대로 하라’고 나섰단 말입니다. 이제는 굶주리니까 안전원이 총을 뽑았어도 쓰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간 없이 법이 지게 되어있단 말입니다.”<sup>40</sup>

2005년 10월 정부차원의 쌀 배급제 실시 등을 발표하였으나 주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조직적인 통제로 억눌려있기는 하지만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빈곤이 장기화되면서 돈이라는 물신이 점차 김일성·김정일이란 우상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 V. 결론 및 전망

북한의 화폐는 공산주의단계에 이르면 폐지될 ‘과도기적’ 경제범주로 간주되어 왔다. 그로 인해 화폐의 유통이 매우 제한되었고,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화폐의 ‘물신성’ 또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숭배가 이를 대체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일련의 화폐개혁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1947년 화폐개혁 당시 발행된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형적인 노동자와 농민이었다. 그야말로 당시 시대의 주인공은 평범한 주민들이었다. 그리고 1959년의 화폐교환에 발행되었던 화폐에서도 그러했다. 그러나 1979년의 화폐개혁에는 그동안 전개되어 온 김일성 숭배가 화폐에 반영되어 처음으로 김일성이 고액권에 등장하게 된다. 북한 사회의 주인이 노동자 농민에서 김일성으로 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면

<sup>40</sup> 탈북자 김00(함북경성 생, 2002.12 입국)의 인터뷰, 세종연구소, 『북한이탈주민면담록』(2003~2004);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p. 34.

이기도 하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국가배급이 크게 줄고 화폐의 유통이 크게 늘어났으며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굶주림의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더 이상 주민들은 국가에 기대지 않고 자신들의 개인생산과 시장거래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욱이 북한정부는 7·1조치를 통해 국가보호에 의한 평등주의를 폐지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에 입각한 자력갱생을 공식화하였다. 그에 따라 기업간 그리고 기업내의 근로자들간 임금격차도 커졌으며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와 함께 과거 탄압의 대상이었던 농민시장이 자본주의 상설시장 형태의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시장은 공식적인 자원배분기구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모든 소비재가 합법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생산재의 시장거래도 점차 확대되면서 현금유통의 영역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제 북한에서도 돈만 있으면 구입하지 못할 게 없는 상황이 되면서 화폐는 점차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돈이라는 물신이 점차 김일성·김정일이란 우상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난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주민들에 의한 ‘자생적인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북한경제는 ‘현물경제’에서 ‘화폐경제’로 이행하고 있다.

향후 북한에서 화폐경제로의 이행은 지속될 것이다. 물론 현물경제 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의 회귀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가능할 뿐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북한의 지도층이 계획경제로의 회귀를 꿈꾼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북한의 경제구조가 시장경제가 없으면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는데다 세계경제의 환경이 더 이상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존속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문제는 계획경제로의 회귀여부에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장경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

■ 접수: 3월 21일 / ■ 심사: 6월 2일 / ■ 채택: 6월 20일